


# 『시니어연구소』

## 창립 기념 토론회

2014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 ☐ 주최 :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시니어연구소
- ☐ 주관 : 국회의원 김현미 (시니어연구소장)

## - 목 차 -

### 인사말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변재일 / 4

시니어연구소 소장 김현미 / 6

### 축사

민주당 대표 김한길 / 9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 11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병완 / 13

### 발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과제

- 의료, 연금, 일자리에 대하여 / 16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

### 토론

서용석 고려대학교 교수 / 28

전형수 대구대학교 교수 / 36

정상훈 사회혁신공간 there 사무처장 / 42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 47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48

## 인사말

시니어연구소 창립 기념 토론회

## 사 말



재 일

민주정책연구원장

?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변재일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시니어 연구소’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에 참석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어르신들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하고자, 민주당의 중장기전략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시니어 연구소’를 설립하여 오늘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발족식과 함께 준비한 토론회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책과제’는 조만간 노년층에 진입하게 되는 베이비부머 관련 주요 정책 현안과 이슈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대안과 연구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 이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의료보장, 일자리 창출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인 만큼 기탄없이 의견을 주셔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이며 2050년에는 37.4%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나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베이비부머세대들의 고령화 진입과 궤를 같이합니다.

고령화사회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는 준비되지 않는 고연령층의 증가입니다.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OECD 최고 수준인 49%에 이르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주요 목적이 어르신들이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공적연금에 배제된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며, 그 보장수준도 실제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노인기초연금 100% 지급을 약속해 당선되었지만, 이제와서는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만 차등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얹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대선때부터 노인기초연금 20만원 일괄 지급(소득하위70% 대상), 공공의료시설 확충 및 의료비 국가 보장 강화, 어르신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처 신설 검토 등 수 많은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니어 연구소’ 발족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니어 연구소 소장을 맡아주신 김현미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 말



현 미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시니어연구소장

시니어연구소 발족식에 와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니어(senior), 사실 중년으로 불리는 우리 세대는 얼마 전까지 ‘세상을 바꿀 것 같던,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든든한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누구는 힘들게 아이 키우다 보니 우리 세대가 중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덜컥 중년이 되버린 5060과 은퇴 후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노년층에겐 ‘제 2의 인생’이 무서운 일입니다. ‘50년 살아왔던 세상이 이런 곳이었나?’ 생소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한민국 50대 이상 세대의 삶에 대해 무관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권자로서 중년과 노년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니어가 처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던’ 우리 세대는 본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니어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선거를 통해 더 이상 시니어가 무대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시니어연구소는 50대 이상 시니어를 정치의 무대 위로 올릴 것입니다. 은퇴 후 일자리, 노후 복지서비스 등 시니어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진짜 시니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전문가 분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있으리라 믿으며 묵묵히 해보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족식에 참석해주시고, 또 오늘 연구소의 방향과 비전을 함께 만들어 주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 사

시니어연구소 창립 기념 토론회

사



한 길

민주당 대표

부설 ‘시니어연구소’의 발족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를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이제 ‘인생은 50부터’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많은 5060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50대는 ‘은퇴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100세 시대에 맞게 인생을 설계하여 활기찬 노후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발족하는 시니어연구소가 5060세대가 겪는 현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5060세대 정책 개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시니어연구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함으로써, 이 문제를 세대갈등이 아닌 세대연대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도 5060세대에 대한 주요 현안과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대안과 연구 과제가 도출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니어연구소가 설립되기까지 애쓰신 김현미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주신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토론을 해주실 서용석 고려대학교 교수,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장, 전형수 대구대학교 교수, 정상훈 ‘사회혁신공간 there’ 사무처장,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시어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대표 

사



병 헌

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입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문제는 은퇴 후 생활입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들의 50% 이상이 퇴직 후 노후준비가 안 됐으며, 60%는 생계비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연금 등으로 생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5%도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노년'이 될 판입니다.

‘준비된 노년’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함께 나서도 성공을 보장 못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한국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은퇴 노인의 복지 후생 증진은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며, 최상의 노후대책으로 불리는 정년 연장 등 일자리 마련은 기업이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람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제입니다.

민주당 역시 우리시대의 중·장년층 및 노인들을 위해 주요 정책 현안과 이슈를 점검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저지를 통해 중·장년층의 국민연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득 80%까지 기초연금 지급을 통하여 노인 복지에 힘쓸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안에 대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미 시니어연구소장님을 비롯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니어연구소 발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병 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번 시니어연구소 설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미 의원(시니어 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시니어연구소 연구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은 미래가 아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인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시니어들이 우리 사회의 핵심계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민주당은 이들 시니어 계층의 요구하는 아젠다 및 정책개발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총선 및 대선에서 힘겨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더 나아가 민주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들을 위한 아젠다 및 정책개발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다룰 시니어 계층에 대한 의료, 연금, 일자리 문제는 우리 시니어 계층이 사회의 부양이 대상이 아닌 사회 활동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사항들이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주제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니어연구소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연구소 발족식과 토론회를 통해 시니어 계층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 시니어연구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시니어연구소가 민주당이 시니어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대변해 내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발족식 및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 제 문

발제문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시니어연구소 창립 기념 토론회

###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과제

- 의료, 연금, 일자리에 대하여

정 창 룰 교수

단국대학교

## 베이비부머세대 (준고령자) 를 위한 정책과제: 의료, 연금, 일자리에 대하여

정 창 룰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 서론

-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노인인구 비중이 2018년 14%, 2026년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흔히, 일본이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에 근접하게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는 국가는 대만 정도.
- 7%에서 14%가 되기까지 18년이 걸린다는 건데,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115년이 걸렸다는 것을 고려하면 선진국 기준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임.
- 예외적으로 빠른 고령화의 원인: 빠른 수명증가와 급감하는 출산율.
- 1960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52.4세였지만, 현재는 80세에 이르고 있음. 50여년 사이에 거의 30년이나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며, 이는 1년에 수명이 평균 0.5년 이상씩 증가해온 것을 의미함. 이는 전후 선진국에서 1년에 수명이 평균 0.2년씩 증가해온 것을 훨씬 초과하는 빠른 수명증가 속도임.

- 그러나, 빠른 고령화에 주요인은 수명증가라기 보다는 출산율에 있음. 수명증가는 의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지만, 그 효과가 서서히 지속적이데 반해서, 출산율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변화로 인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띰. 70년대에 출산율은 4명 이상이었으나, 최근 (2000년대 이후) 에는 1.1~1.3명 정도로 세계 최하위 수준임. 1972년에 102만명이 출생했던 것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1년까지 60만명 대로 태어나다가 2002년 50만명대, 2003년부터는 현재까지 매년 40만명 대로 태어나고 있음. 고령화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출산율 정책을 정부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되어야 함. 그러나, 실제 관료들이나 정치가들에게는 별로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
- 오늘 토론회는 준고령자, 흔히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표현되는 50-64세들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는 시간임. 베이비부머라는 용어 자체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부머는 1956-63년 사이에 출생한, 다시 말하면, 현재 시점에서 52세에게 59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약 700만명으로 추산됨)을 통칭함. 오늘 토론회는 그러한 베이비 부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보다 다소 넓은 개념에서 -아마도 1천만명을 상회하는 숫자일 것임
- 그들에게 직면한 (혹은 조만간 직면할) 의료, 연금,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토론하라는 의미라고 판단됨.

## 2.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

### 1) 이들 세대의 차별성

- 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전례 없이 양적으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동시에 퇴직하게 되면서,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생산인구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어떻게 전세대와 다를 것인지에 대한 것일 것임.

- 현시점에서 이들은, 일자리에 있어서는 퇴직하는 사람과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전보다 낮은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음. 40대까지는 어느 정도 동질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50대 이후에는 보다 확실하게 winner 와 loser 가 구분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서구 선진국에서의 현상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 준고령층은 되도록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점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40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퇴직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제 평균 퇴직연령은 57세로 나타나고 있음. 일자리 문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임.

- 미래 시점에서 이들은, 조만간 고령자가 될 사람들로서, 현재 고령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먼저, 현재 고령세대들(70, 80대)을 보면, 1930년대 혹은 40년대에 태어나 궁핍하게 살았고 교육의 기회도 넓지 못했음. 또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던 시기에 살았었기 때문에 노후준비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고 (국가적 대책도 없었음), 3~5명 정도의 자녀가 있었음. 그러나,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서 자녀로부터의 부양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노인빈곤이 높은 국가의 대상이 되었음.

-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당히 다른 배경을 가짐. 개인적 편차는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아무튼, 1950년대(혹은 60년대 초)에 출생하여 한국의 거의 모든 사회경제 영역이 급속도로 팽창할 때, 상대적으로 충분한 교육과 안정된 경제환경에서 살 수 있었음(물론, 90년대말 경제위기 이후 환경이 급변한 측면은 있음). 자녀는 대개 1~2명을 두었고, 애초에 자녀로부터 노후에 대한 부양

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세대임. 정책적으로는, 국민연금 등의 제도를 통해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였으나, 과다한 자녀 교육 지원 등으로 인해서 대다수는 거주하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실제 노후를 위한 준비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함.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들은 현재 고령세대와 비슷하게(조금 개선은 되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노인빈곤에 시달릴 것이 분명함.

## 2)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사회 현상

- 10~15년 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 주변에서 노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임.
-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956~63년생이 약 700만명에 이르고 있어 현재 50~64세 그룹은 1천만명을 훨씬 상회하며, 이들 가운데 일부가 사망한다고 해도 10~15년 후 노인 인구는 상당할 것임. 몇 년 전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2030년에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118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4.3%에 이를 것임.
- 유럽이나 일본의 주택가에 가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들 국가들이 20% 미만이거나 갓 20%를 넘은 수준임. 앞으로 15년만 지나면, 외국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보게 될 것임.
- 그런데, 너무 naive하게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조금만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단지 이러한 주변의 외양변화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내포할 개연성이 높음.
- 먼저, 이들이 충분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채 고령인구에 진입하게 될 경우에, 경제활동 인구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또한, 국가의 경쟁력을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산업지도 역시 상당히 바뀌지는 않을 것인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치매에 걸려 고통 받는 가족들은 얼마나 많아질까?

-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선진국에서 노인인구가 많아져도 그들이 여유롭게 사는 모습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임. 오히려, 고질적인 빈곤 및 취약계층으로서 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음.

-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아무런 정책적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노인 그룹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 사회적 여파는 현재 상태에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임. 따라서,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며, 이는 현재 시점에서 해야 할 것과 미래 시점에서 해야 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임.

## 3.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보장, 의료 문제

### 1) 일자리 정책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적 차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충분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당수는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퇴사하고 다른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거나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음. 실제로 40대 후반부터 퇴직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 절대다수는 재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음. 이는 선진국처럼, 연금수급이 가능한 연령이라면 되도록 빨리 퇴직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당연히 이들 베이비부머들의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단기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나 결혼자금 지원 비용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긴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들에게 되도록 길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은 가장 핵심적이어야 함.

- 사회적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음. 현재 시점에서는, 농촌지역이나 이른바 3D업종에서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타나지만, 2030년 정도가 되면, 다양한 분야, 특히 생산직 부문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산업을 포기하거나, 외국인들을 대거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음.

- 작년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조치는 이러한 풍토를 반영한 것으로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년개념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을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음. 선진국에서는 대개 '연금수급개시연령=정년'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며, 이는 고스란히 노후소득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라도, 정년 개념을 확고히하여 예측가능한 노후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임.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이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공서열제로 인한 임금 차이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고안없이 정년 의무화 조치가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현재의 계급정년제 (직급정년제)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승진 없이 기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 선진국이나 일본의 경우, 고위직으로의 승진 트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 등의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경우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나이가 차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부 자리를 주고 시간이 얼마 지나면 해고하는 문화를 빨리 폐지할 필요가 있음.

-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측면에서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 특히,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함.

- 자칫하면, 막대한 재원은 사용하면서 실제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가능하며, 또한 가장 현실적으로는 청년들이 일해야 하는 자리를 이들이 빼앗는 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앞서 거듭 언급했듯이, 베이비부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반면, 기업들은 이들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음.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훨씬 비용이 적게드는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포화상태로 대기하고 있고, 연공서열제 하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베이비부머들은 부담스럽기 때문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오랫동안 (그러나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운영하는 정책이 임금피크제임. 이 역시 취지는 좋은 제도이지만, 그보다 일부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진적 퇴직'을 소개하고자 함.

- 점진적 퇴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드는 생산성 (혹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임금대비 생산성)을 공적연금 재정을 활용하자는 취지임.

-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를 노동시간 축소와 연계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음: 만 55세 이상이 되면,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은 약 40% 정도를 받음. 그리고, 임금의 약 20% 정도를 국민연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임. (사회보험 가입은 그대로 유지되며, 세금 면제 등을 통해서 실제 순소득을 70% 이상을 제 공하도록 하는 것임)

- 얼핏보면, 국민연금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조기퇴직

해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볼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이 정책 역시,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 다시 말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영역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해서 준고령자들이 자연스럽게 근로를 연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일자리 부문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노-노 일자리'에 대한 것임.

-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130년 전에 사회보험을 처음 만든 비스마르크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관습임(60세인 경우도 많이 있기는 했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노인보다 현재 노인들은 훨씬 건강하다는 점이며, 또한 기계화 등으로 인해서 힘든 육체노동이 필요 없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음. 따라서, 65세 이상은 일할 수 없는 노동무능력자로 굳이 분류할 필요는 없음.

- 여기에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 care 에 대해서 건강한 노인들을 잘 활용하자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및 확대, 그리고 치매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노인에 대한 care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병약한 노인들을 care 하는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잘 공감할 수 있는 계층은 젊은 사람보다는 건강한 노인들일 것임. 이들 가운데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임.

## 2) 연금 정책

○ 베이비부머들은 그들이 국민연금수급자가 되었을 때, 대다수가 연금소득이 그들이 생활하기에 다소 부족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체가 배제되었던 윗세대들에 비해,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길게는 30년 이상 가입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20년 전후로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됨. 그 정도로는 (특히 홀벌이었을 경우에는) 상당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물론,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윗세대들에 비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이 높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보다는,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최소 연금 정책을 도입해서, 되도록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되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 정도를 보전해주는 방향이 훨씬 효과적임.

-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연금이 너무 미성숙하여 최저연금의 도입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도록 만들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현재 기초노령연금 방식은 너무 효율적이지 못함.

- 이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최소연금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 가운데 어떤안이 중장기적으로 설득력이 있을지를 검토해야 할 것임. 발표자의 판단으로는, 연계가 불가피하다면, 현재의 정부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은 중장기적인 발전방안과 맞지 않으며, 국민연금 금액과의 연계는 다소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또한, 중요한 연금정책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소득대체율 측면에서 봤을 때), 기초노령

연금 5%, 국민연금이 30%, 퇴직연금이 2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30년 가입시). 따라서, 퇴직연금은 전체 노후소득에서 1/3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음. 사용자가 매달 피용자의 월급에서 8.3%를 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되는 제도임.

- 현재 퇴직연금은 상용 근로자 가운데 50% 정도가 가입한 수준임. 그러나, 퇴직연금정책을 자세히 보면,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된 채 실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사적연금을 부정적으로 보는 진보 세력에서는 퇴직연금의 개선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데, 이미 퇴직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더 이상 취사선택의 여지가 있는 변수가 아니라 이미 상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적용대상 확대와 가입독려를 통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할 때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극대화시키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최저연금을 통해서 노후빈곤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그리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부족한 노후소득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퇴직연금이 그 기능 회복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3) 의료 문제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가장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회보험제도이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주요 의료서비스 고객이 되는 시점이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을 만큼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짐.
-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내용은 비용 문제임.

- 2013년 요양급여 비용은 50조원을 돌파하였음. 1999년에 약 9조원 정도였으니까 건강보험 비용 증가속도는 엄청난 속도이며 이에 대한 제어는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현재의 정책으로는 제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임. 의료서비스의 가장 주요한 대상자는 노인임. 2013년 요양급여 비용 50조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34.5%인 17조 5000여억원을 사용하였음. 노인인구가 11.5%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의 의료이용이 대단히 높음.

-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노인세대로 진입하게 되는 향후 10-15년 사이에 의료비용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할 것이 확실함. 이에 대한 획기적인 비용통제 안이 나오지 않으면 건강보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됨.
-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제도는 구조적으로 개혁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외양은 사회보험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영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통제없이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는 제도임. 비용통제기전을 마련해서 무분별한 투자를 막아야만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세대가 되었을 때도 이 제도가 무사히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다음은 건강보험이 공공제도로써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의료비 이용을 연계해서 살펴보면, 경제성장이 높으면 의료비 증가가 가파르고, 경제성장이 낮아지면 의료비 지출도 많이 낮아짐(예. 2008년). 이는 경제성장이 낮아서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면 의료이용 욕구가 있어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임.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도 풍족하게 노후를 보낼 것 같지 않은 예상이 나오는데, 이들이 충분히 의료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임. 노인들에게까지 현재의 본인부담금 수준 또는 비급여 제도가 존재하는 한 베이비부머들의 미래 의료이용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본격적으로까지 대안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일부 국가들이 사용하는 노인을 위한 별도의 공공의료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 결론

- 베이비부머 세대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없을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과거의 노인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이 예상됨.
- 향후 15년 내에 노인 인구가 배로 증가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있을 순 없음.
- 기초연금 돈 얼마 준다고 노인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기회 등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됨.

## 토론

용 석 ( 사회학과 )

### ■ 베이비부머 시대의 일자리 정책

- 베이비부머 집단의 은퇴로 말미암아 야기 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와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정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고 있음.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정교수님 설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덧붙이려고 함.
- 정 교수님의 일자리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음. 하나는 은퇴와 관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노노케어처럼 새로운 일자리 유형을 만드는 것임.
- 은퇴 부분은 가급적 이들 집단의 근로 연장과 관련된 것임. 연금 수급에 맞춰 안정적인 은퇴를 하거나, 연금이 지원하는 점진적 은퇴, 혹은 자연스럽게 근로를 연장하는 문화와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음.
- 또 하나는 근로연장이라기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임.
- 현재 상당수의 베이비부머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나 고용연장은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 하지만 저 성장의 시대에 고용연장을 통한 고용유지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한국의 제조업이 후발 국가들에

의해 추격당하고, 서비스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음. 또한 기업에서는 퇴직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 더불어 청년 실업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용 연장은 부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대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적성을 살려 재취업하는 게 구조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 보다 역점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특히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일자리는 주요한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음. 가사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은 고령화 지수가 높아질수록 고용 비중이 높게 분포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를 심층 면담한 결과, 생계형과 사회봉사형이 결합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음. 이러한 형태에 부합하는 일자리로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서비스 창출은 매우 의미 있음.

- 유례없이 빠른 경제의 발전으로 점차 위태로워져 가는 지역사회나 가족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임. 특히 공동체에 대한 뚜렷한 기억과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활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예로, 일상생활에서의 정신건강 관리는 시급한 실정임. 경쟁에 내몰린 10대에서 절대 빈곤에 고통을 받는 80대 노인까지 자살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음.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 2007년 7조3천367억원→2011년 10조3천826억원...41.5%로 증가하고 있음.

- 우리 국민 8명 가운데 1명이 알코올·도박·인터넷·마약 등 4대 중독(中毒)에 빠져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따라 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있음. 급속한 경제발전에만 따른 공동체 결속 와해가 만들어 내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고 있음.

- 바우처 사업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사라는 직업 창출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훌륭한 예가 될 수 있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으로 스스로 건강을 보살피고 참고 살아왔던 감정을 수용하면서 갈등을 완화시켜 자신을 치유하고 삶을 통합하여 가정의 치유사로 나아가 스트레스관리가 필요한 곳에 재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이들은 청소년 쉼터나, 복지관, 교도소, 복지 서비스 센터나 주민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음.

-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매개체로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에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음. 베이비부머들에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협동

조합 모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할 필요가 있음. 이들이 쉽게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함.

-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의료나 복지는 물론 생활과 문화까지도 '협력'의 힘으로 '살아 숨쉬는 마을'을 만들었던 일본의 미나미 의료 생협은 하나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음.

- 협동조합보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의 첨병이 될 수 있음. 영국 사회적기업의 전국적 조직인 'Social Enterprise UK'는 2011년 영국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전반적 경향을 보여주는 연구를 발표하였음. 영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이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 전체 사회적 기업들 중에 무려 14%가 최근 창업된 회사일 정도이며 이는 중소기업의 창업보다 3배가 많은 수치임.

- 일자리 창출 또한 중소기업 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사회적 기업이 거래액 대비 주류 경제에서 활동하는 소기업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음. 성장률 또한 중소기업의 그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사회적 기업의 성장률은 58%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8%에 그쳤음.

- 사회적 기업의 발전경향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모습은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 국가로부터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회의 높아지고 있음. 영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국가가 아니라 주로 일반 대중과의 거래 비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중임.

- 사회적 기업의 발전 경향의 또 다른 모습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성이라는 목표가 그다지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임. 조사 대상이 된 영국의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은 가장 열악한 지역사회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문제들이나 지역사회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 획득한 이윤을 다시 지역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은 82%에 이르고 있음. 이 보고서에 나타난 영국 사회적 기업의 전체적 모습은 빈곤한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켜가고 있는 중임.

- 사회적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영국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용을 활발하게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마을 기업도 창조적 일자리 창출의 매개체로 발전시킬 수 있음. 마을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지역 자활 프로그램임. 일본에서는 현재 5조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수요자를 위한 소량 다품종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간의 구분은 그리 명확치 않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마을기업은 지역성·주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더 강조하는 것이 특징임. 마을기업은 지역성에 기반하여 일반시민(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비즈니스 수법을 도입하는 것임.

- 마을 기업의 예로,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부대 서비스 때문에 거품 비용이 잔뜩 낀 사업들을 주민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모델로 바꿀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마을기업 사업은 자발적 주민참여와 함께 정부의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채택, 추진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3조 원, 사업체는 8,000개로 약 32,000명이 고용되어 있음. 노동후생성은 2017년까지 고용규모가 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분야는 1위가 지역 활성화(60%), 2위가 보건의료 복지(24%)로 나타나고 있음. 일본은 정책적 지원은 하되 제도화하지 않고 있음.
- 보다 적극적인 차원으로서 사회 혁신을 통해 이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일반적으로 개인에 의한 사회혁신보다 사회운동을 통한 사회혁신이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짐. 예로, 환경운동은 도시 재활용 센터에서 풍력 농장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사회적 혁신을 몰고 왔음. 또한 페미니즘에 의한 사회혁신은 아동 보육 센터에서 낙태, 모성 휴가, 평등한 이혼법 등 셀 수 없는 변화를 몰고 왔음. 장애운동이나 국제적인 차원의 사회운동인 공정무역 또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차원을 가져다주고 있음.
- 사회혁신은 최근에 보다 의도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에 의해 추구하고 있음. 사

회혁신 클러스터도 그 중의 하나임.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을 추구하는 배경에는 인간관계를 강화시키는 경제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 함. 이는 경제적 성장이 중산층을 확대시키고 이 안정된 계층을 토대로 점차적인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과거의 인식에 대한 하나의 도전임. 지속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빈곤을 해소하지 못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은 별도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과학에 있어서의 혁신과 필적할 정도의 사회적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 사회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서구에서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중임. 미국과 일본, 스페인 등 세계 몇몇 곳에서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 중임.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는 사회적 목적 회사들, 비영리벤처, 중간지원조직들, 자금제공기관, 대학들 그리고 조사연구 기관들이 서로 지리적으로 동일 공간 속에 집중되어있는 일종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임.
- 미국의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는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시작되어 발전되었음. 자발적인 관계의 연결망으로 발전되어온 실리콘밸리의 특징을 따라 사회적 기업의 자발적 네트워크가 점차 파생되어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해 왔음.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 내에서는 사회적 기업 중심 뿐 아니라 각 구성개체 간, 즉 중간지지조직과 벤처 자선과 같은 자금제공기관, 각 NGO/NPO와 정부기관, 대학과 연구소, 소비자 그리고 지역 내 자리 잡은 일반기업 등 각 개체 간 서로서로의 조밀한 네트워킹으로 구성되었음.

- 스페인의 바스크 (Basque) 지역에서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들과 협동조합을 위한 산업 단지 (industrial park)를 조성하였음. 이 산업 단지 내에는 이들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비영리조직, 재단, 사회적 목적 기업이나 다른 기관들이 입주하여 본격적인 물적, 인적 자원의 동원을 도모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삿포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음.
- 서구에서처럼 사회혁신 클러스터 창출을 통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적 지원이 필요함.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중차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국가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중·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함. 베이비부머 세대의 취업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이들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한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들을 통해 창의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노력 또한 절실함. 이를 위해 사회혁신 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토론

형 수 (                      경제학과)

### I. 문제 제기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과제를 의료, 연금, 일자리 등으로 나누어 제기한 것은 시의성이 아주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을 다른 세대와의 차별성과 차후 노인이 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구분하여 거론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책 과제를 구체화 하는데 보탬이 된다. 과제가 분명해야 해법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제 제시에 비해 해법 내지 대안 모색을 위한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 이를테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적 과제로 제시한 의료, 연금, 일자리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지만,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II. 사회적협동조합이 대안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발제자가 제시한 상호보완적, 종합적 해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방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이미 수백 년에 걸쳐 검증은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잠재적 효과를 활용하고자, 지난 2011년 10월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께서 대표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토대로 정부는 사회 양극화

의 극복과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해법을 협동조합에서 찾고자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년 12월부터 시행하였다.

그 골자는 업종과 분야에 제한을 받지 않고 5인 이상이 모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과 법인격 부여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 기본법은 제4장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단결과 통합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를테면 여러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통합성과는 기본법이 그 수단으로 명시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효능에 의존한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강자의 시장지배를 견제하고 소외된 저소득·빈곤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유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을 달리하면, 빈곤 퇴치, 고용 창출 등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실천적 조직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sup>1)</sup>

기본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2013년 11월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은 132개이며, 그 중 101개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31개는 아직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서울, 경기 등 이른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지역, 특히 울산, 전남, 경북, 제주, 세종 지역의 경우에는 전무하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및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다.<sup>2)</sup>

- 1) 이처럼 사회경제적 통합에 유익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 및 진화하고자 민주당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법률적 제도를 제공하였지만, 그 효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없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아닌 서민의 삶의 질을 높기 위한 대안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서민을 위한 서민 정당으로써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 2) 이에 비해 일반협동조합은 동기간에 3,000개를 돌파하였다. 이는 소상공인 진흥회가 협업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자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의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사단법인 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법 시행 1년, 전국협동조합 설립 현황 보고서, 2013년 12월, pp. 5-8).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널리 알리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북부 이태리 지역에서 다대한 성과를 거둔 사회적협동조합 ‘Tagesmütter(일일어머니)’를 실례로 들어 찾아보고자 한다.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특히 시니어의 생활안정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공모델로써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 III. 사회적협동조합의 고용창출 효과 사례: 북부 이태리의 사회적협동조합 ‘Tagesmütter’

#### 1. 발생과 발전

이 일일어머니 협동조합은 지난 1992년 북부 이태리의 독일어 지역, 즉 남부 티롤(south tirol)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이 협동조합은 오리지와 독일의 협동조합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소재지는 북부 이태리의 Bozen(Bolzano)에 있으며, 현재 100명 이상의 일일어머니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 남부 티롤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 2. 관리·운영

일일어머니 협동조합은 비영리 조직이며, 가정과 직업의 균형 유지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부모들의 요구에 적합한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의 어머니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하고, 요청에 따라 일일어머니로서 취업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시간당 임금을 받고 어린이 돌봄에 종사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과제인 어린이 돌봄 사업을 보완 및 촉진하는 것이다. 당초 일일어머니 협동조합은 공공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1996년 ‘어린이 돌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재정적, 제도적 도움을 받게 되었다. 현재 만 3세까지의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민간조직, 공공기관, 지자체 및 기업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3. 직원/조합원

현재 100명 이상의 일일어머니들이 남부 티롤 전 지역에서 만 3세 어린이 돌봄에 종사하고 있다. 일일어머니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460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중 100 시간은 일일어머니 협동조합, 유치원/어린이 집 등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40 시간 연수를 받아야 한다.

### 4. 재정

일일어머니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공공지원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일일어머니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및 협회는 보험료를 포함한 투자 및 운영비의 70%까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또한 지방정부는 일일어머니 종사자의 교육비를 부담한다. 최근 일일어머니들의 연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어린이 1명 당 1시간 보수는 평균 약 5.3유로이며, 지방 정부는 어린이를 맡긴 부모들의 자부담에 대해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시간 당 최고 3유로이며 월 176 시간을 넘지 못한다. 시간 당 보조금은 가족의 소득에 따라 다르다.

## IV. 제도적 지원

상기한 일일어머니 협동조합은 가정과 직업의 균형을 이루어 사회경제적 통합 효과를 일구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테면 양육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육아 부담을 덜어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이루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경제적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 대안 조직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협동조합적 해법의 긍정적 실례를 제시하고, 특히 저소득·빈곤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홍보 책자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정치가들에게 협동조합적 해법에 대한 믿음을 높이기 위함이다.
3. 협동조합적 활동을 사회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4.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거친 협동조합적 영업개념과 이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별 모델을 개발하여 관심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5.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6.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관련한 조세특례 등 세제상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
7.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널리 알리고 강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성과보고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 성과 보고서를 매년 총회에 제시하고, 그 성과를 정관 등 규정에 명시된 조합원의 지위향상에 맞추어 보고해야 한다.
8. 조합원 카테고리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기본법 제93조(사업) 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주(主)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에 걸맞은 조합원그룹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소외계층(예: 전문적 기술이 없는 자, 장기간 실업자 등), 무급의 명예직 직원/자원봉사자(예: 조기퇴직자 등 사회적 성향이 강한 사람), 노동자(사회적협동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노동자), 기업시민(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기업, 기관 및 이외의 이해단체 대표자),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대표자. 이와 같은 조합원그룹의 이질화는 지역사회 재생 등을 위한 지역 자원의 확보 및 효과적 사용에 큰 보탬이 됨.

9. 예컨대 이자 등 경제적 대가를 원하지 않든지 혹은 지원금 성격으로 납입한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10. 협동조합 설립, 지원, 육성 등 협동조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조직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비분할적립금 형성과 분배, 비조합원거래, 성과측정, 감사,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성 이정에 관한 기준 제시 및 오용 감독 등에 관한 논의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치적 결정권자와 입법자들이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착상이 아니라, 이 착상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예컨대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그룹과 기업 협의회(CEGES)’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에 담고 있다: “Better known, more recognized, more effective”.

이러한 점들을 유의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과 제고를 위한 입법과 해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관련법의 실효성은 입법자의 체계적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변화를 발전적으로 다스리는 지혜에 의존한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 토론

상 훈 ( there)

### 1. 베이비부머 / 시니어 세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

- 1) 주로 50세 이상의 시니어를 중심으로 4000만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은퇴자협회(AARP) 배리랜드(Barry Rand) 회장은 아스펜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한 인터뷰 형식의 강연에서 노년세대에 대해 ‘가능성의 세대’ (Age of Possibility)로 새롭게 재정의 함.
- 2) 현실을 돌아보면 시니어세대를 오랜 일터를 떠나 휴식을 취하는 세대라고 정의할 수 없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세대라고 봐야 하며 시니어 세대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재정의할 필요 있음
- 3)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를 준고령자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과거 60대의 평균수명이던 시절의 50대와 100세 시대인 오늘의 50대를 놓고 보면 지식과 역량, 자산, 네트워크, 건강, 사회적책임에서 과거 기준으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역할이 기대되고, 수행할 역량을 가지고 있음.

### 2. 베이비부머/시니어 세대 창업 혹은 일자리 정책의 전환 필요

- 1)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떻게 돌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대략 지금까지는 국가 주도 방식 (유럽복지국가), 혹은 개인이 모든 걸 책임지는 시장만능주의

방식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기대하던 노년의 삶을 만들지 못하고, ‘한쪽은 수동적인 노인을 다른 한쪽은 절망하는 노인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2014, 이원재 소설픽션 지금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어져 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누구도 더 상황이 좋아졌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음.

- 2) 민간기업내 일자리 증가나 경쟁우위를 위한 창업 지원 등 시장경제 방식의 해법은 대안이 되기 어렵고, 한계가 명백함.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0대 대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해외 투자의 확대나 자본 효율화등으로 인해 기업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자의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기존 일자리가 더 길게 유지되거나 일자리가 질적으로 개선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기본적으로 시장내 경쟁은 속도, 생산성,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어, 다른 세대와 동일 조건에서 베이비부머/시니어세대 창업이나 일자리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현재 시장 경제 내 시니어 창업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위험 극복을 위한 도전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플랜차이징, 외식업 등 외형 회피형 창업이 많아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창업 지원도 커피바리스타, 원예, 택배 등 시니어에게 익숙한, 그러나 이미 성숙화된 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 롤모델이 될만한 성과를 발견하기 어려움.

- 3) 결국 베이비부머 일자리 정책은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은 조합원 필요 혹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조직임. 비즈니스 수행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거나, 지역 공동체가 복원되거나,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거나, 민주적 조직운동을 통해 조합원 필요를 만족하는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회혁신 기업임. 현재 협동조합의 경우 작년 이후 설립된 3500여개 조직 중 절반이 넘는 조직이 사업자 협동조합이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수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업 수행을 하고,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임. 다른 형태의 기업에 비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고 있으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형태도 창업자들의 목적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함.

사회적경제 기업은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조직과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음. 이동거리가 많지 않은 동네와 마을 중심의 기업이 많고, 1인1표제를 통해 민주적 조직운동을 지향하고 있어서,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 한편으로 대기업중심의 시장 경제 구조속에서 협동 혹은 내부 거래를 통해 경쟁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고 한편 고용 안정성이 영리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아 지속가능성 면에서도 유사 규모 대비 우위에 있음. 또한 젊은 세대와 달리 어릴적 공동체에 대한 추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경쟁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세대이지만 동시에 협동의 문화 복원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세대임.

### 3. 베이비부머 세대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활성화 정책 방향

- 1) 무엇보다 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 리더 등 베이비부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대부분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영리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기존 영리 비즈니스 경험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철학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창업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 네트워크도 부족함. 사회적경제 기업의 리더와 구성원에 대한 육성과 연결이 되지 않는 한 공모 사업 중심의 사업비 지원 방식은 실패에 그칠 가능성이 큼. 정책 실현과 관련해서는 기존 창업 정책에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이 이미 존재 하고 있어, 이 지원 정책안에 어떻게 이 방향의 지원을 병행해 나갈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 2) 베이비부머에 맞는 전략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공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공익형 SOC 건설회사, 소셜플랜차이징 모델, IT 개발자 협동조합 모델, 마을기업 등 베이비부머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연구가 필요함. 특히 다양한 산업에서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최근 편의점업주분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는 그룹이 만들어지고,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플랜차이징 사업 등에서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을 고민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은 아직 크게 부족한 상황임. 특히 베이비부머의 문제나 노년세대 문제에 대한 해결 등 자기 세대의 현재와 미래 문제에 대한 주체적 참여를 위한 모델 개발이 필요함.

- 3)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센터 운영

최근 서울시 이모작지원센터와 협동조합 연구소에서 베이비부머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진행했는데, 20여개가 넘는 팀들이 참여해 2달이 넘는 기간동안 교육과 멘토링이 진행되었음. 시니어 창업 팀보다 상대적으로 교육과 멘토링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음. 특히 청년세대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베이비부머 세대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세대 통합형 창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기도 했음. 그러나 세대 특성상 자기 고집이 강해 사업 모델의 변경이 쉽지 않고, 멘토링도 쉽지 않았음.

새로운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공감과 비즈니스 경험 부족,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을 적극 검토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좋은 사회적 기업가의 등장을 유도하고, 연결해서 롤 모델을 만들어 확산해 나가야 함.

### 4.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사회 전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한국사회는 불안하고 불행한 사회를 넘어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어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출산율, 자살율로 대표되는 불안하고 불행한 사회를 넘어 최근에는 자유와 평등이란 진보적 가치를 넘어 신뢰, 안전, 법치 등 보수적 가치조차 설 땅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고 있음. 새로운 시대정신과 가치의 재구성을 통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전환을 만들어낼 세대는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생각함.

## 1. 왜 시니어인가?

- 인구학적 측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인구비중의 증대
  - 정치사회적 측면(경험적 측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시니어의 선택이 대선 승패를 갈랐다.
  - 이슈적 측면: 안보이슈 중대성과 함께 노후불안 이슈의 중대성 증대(적극적 대처 못했다는 분석-가계부채, 하우스푸어, 기초연금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 아젠다 셋팅했나?)/핵심은 노후불안 이슈(의료-건강/소득-연금, 일자리 문제)
- (\*“50대 이상의 고도성장세대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반영안될 것이라는 정서적, 정치적 반란이 지난 대선의 50대 보수화론의 실체”?)

(참고)

-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론과 관련한 문제의식 및 쟁점
- 1). 과연 인구구조의 변화(중앙선관위 자료: 2030세대 유권자는 38.2%, 50대 이상 중장년층 39.9%)--지난 10년간 2030세대 10%포인트 줄고 5060세대 10% 증가. 과연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의 선거전략을 지배할 것인가?(<18

그리고 19>, 2013)

- 선거는 세대적 구분 이외에도 계층, 성별, 지역, 종교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가지 요소로 환원할 수가 없다. 그런가?

## 2). 5060세대의 인구증가보다 정말 50대 보수화가 맞는가?

- 상당수 50세대는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떠나 대부분 영세자영업자. 중산층으로서 자신감도 상실. 날로 소득이 줄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로 불안. 자녀학자금, 결혼자금, 가계대출로 고통---근본적으로 50대 보수화는 경제불안에 기인.그러나 경제불안만이 전부인가? 50대 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안보포폴리즘(<18 그리고 19>,2014)? 정말 그럴까?
- (보수진영이 사회경제적 정책 수용하면서 이념, 안보, 중복논쟁을 일으킨 게 주효). 50대 보수화는 경제적 보수주의가 아니라 문화적 보수주의. 거친 막말과 태도에 대한 거부감. 50대 보수화는 잘못된 전략이 만든 결과)-50대 세대의 의식과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진보개혁 측의 전략적 오류)

- 3). 진보개혁(민주진보)진영은 50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생활밀착형 정책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그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나?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구체적인 생활정치 공약은?
- 4).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보여준 한국 정치에서 지역, 이념, 계층(계급)의제의 특성은 무엇이었나? 계층의제(경제민주화, 복지)가 지역(영호남 충청 등 지역색), 이념(경제성장, 대북정책), 사회문화적 가치(사회적 질서와 문화적 보수성)의제를 넘어섰나? 지역의제는 약화됐나? 대북의제는 더 강화됐나? 강화한 선거전략이 주효했나?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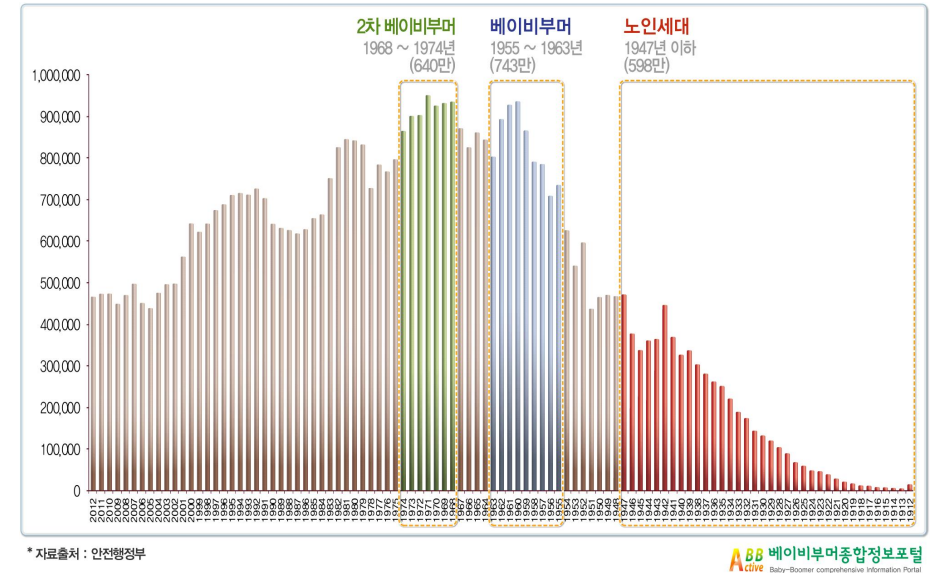
- 5). 경제요인의 경우 2030대에 큰 영향, 하지만 4050대는 경제요인의 영향이 적었다, 아니 50대 이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그들은 반엠비이면 반노무현-반진보성향도 있다. 그런가? 만약 그렇다면 ? 세대별로 상이한 접근이 필요한데, 어떻게 맞춤형 접근을 할 것인가?
- 6). 50대 이상을 정치적 소외에서 벗어나도록 해 친 진보개혁으로 이끌 전략과 정책은 무엇인가? 가계의 책임자인 50대(2017년 인구비중이 45.1%)의 불안, 경제불안, 안보불안 , 노후불안 등 각종 불안을 풀어줄 정책방안 및 전략은? 이게 핵심. 새로운 일자리? 연금 등 노후 문제?

## 2. 시니어 세대의 핵심으로서 베이비부머와 그들을 둘러싼 질문

### 1) 베이비 부머의 정책과 영향

- 베이비 부머 누구인가(55-63년 1차, 69-75(68~76년)2차)
-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절대빈곤의 유년기, 교육열의 청년기, 민주화의 세레 세대(넥타이부대), 고도경제성장시대(주역, 수혜자=자녀수 1.9명, 대다수 배우자 곧 부부, 평균가구소득 400만원대, 자산 3.3억원,63.9% 일자리 희망), 아이엠에프 파산세대(영세자영업자 등 각종 푸어-워킹, 렌트 푸어 등/일 우선의 가치관, 건강중시, 노후불안 그러나 연금외 마땅한 대처마련 못한 끼인세대, 샌드위치 세대)?
- 베이비부머가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가?(과학적 검증 미약, 과잉호들갑은 금물, 고령화대책이란 큰 틀에서...사회경제적 변화의 검증요소는 1)노동시장의 변화(숙련노동자 감소 및 단절) 2)국가재정문제(지출규모에 대한 과잉공포 주의)3)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적 대처 4)가족 문제(황혼이혼-일본, 부부갈등, 샌드위치세대의 자존감(위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여기면서도 자녀들의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자식들에 대한 부양의존도는 높지 않은 상황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혼란)



\* 핵심은 일자리/건강/연금/주거

\* 다만 주의해야할 것은, 사실, 현재의 노인층보다 베이비부머는 경제적으로 나은 편임.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세대이고, 많은(약 70~80%) 베이비부머가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어 역모기지제도를 확대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미래노인은 지금 노인보다 훨씬 감소될 것. 다만, 현재의 소비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문화생활(여행, 여가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족함.

2) 이들 문제를 위한 사회적 대처로서, 소득보장(일자리, 연금), 주거 및 의료정

책(비용)적 접근은 어떠해야할까?

- 발제문은 크게 보면 이와관련해 1과 2의 질문에 대해 응답하고 있는데 세 부 정책에서 논쟁점이 있으나 향후 토론을 통해 정리되길.
-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 국가가 손을 놓고 있었나? 그렇지 않음. 2003년부터 청와대와 복지부 중심의 많은 부처가 참여해 나름의 고령사회대책을 추진해왔음. 다만, 정책의 충분성과 적정성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은 사실.
- 현 정책에서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어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 선행될 필요? 곧 고령화의 현재 정책 분석 평가 선행
- 새로운 맞춤형 정책대안?(국가와 시장, 가족,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거버넌스?)

### 3. 좀 더 추가적 세부 질문: 생애사적 및 다차원적 접근

\* 생애사적 질적 접근

- 베이비부머는 어떤 삶의 궤적을 밟아왔는가?
-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 무엇을 꿈꾸며(바라며) 무엇을 걱정하는가?

\* 다차원적 접근

- 베이비부머라는 호칭 안에서 발견되는 일반적특성과 달리 그 안에 서로 다른 세부적 유형은 없는가?
- 베이비부머라는 호칭 안에서 발견되는 남녀 유형의 특성 차이는 없는가? (젠더 관점에서 바라볼 측면은 없는가?)
-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정책 및 일자리 정책 등 여

타 사회정책간에 발생할 긴장과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

--> 향후 연구소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면밀하고 과학적인 분석 선행(2010년 이후 보사연, 서울시포털 등에서 이미 선행연구가 적잖음)

### 4. 베이비부머에 대한 핵심 대책?(보사연, 2010 등)

- 기본 관점: 사회경제정책이란 큰 틀에서 베이비부머 대책 위치
- 항목별 대책
- 연금: 공적연금사각지대 해소
- 건강: 보장성 강화(예: 건강보험 하나로)
- 장기요양비용 증가억제
- \***젊은 자녀세대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 등 정신 건강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체계화된 노후설계 서비스 및 여가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활동
-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모색**

<참고>

- \* <18그리고 19>(이창곤, 한귀영)
- \*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조사(보사연)
- \* 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보사연)
- \*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 움직임(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고용노동부의 정책 토론회 등)

## 토론

주 경 ( 입법조사처 )

- 인구의 양과 질, 연령별·성별 소집단 구성비 등 인구구조 상의 특성과 보건 정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보건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시니어연구소’의 창립을 환영하고, 향후 시니어연구소가 정책·입법 영역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과 기여에 대해 기대가 됨
- 한국갤럽의 『2차년도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보고서』<sup>3)</sup>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2010년 1차년도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패널들 중 3,275명을 2012년에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지난 2년간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변화를 가족, 일, 건강, 재무, 라이프스타일 등 8가지 다양한 영역에 걸친 심층적 분석함
  - 결혼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2010년 46%에서 2012년 52%로 증가하였고, 이혼을 고려한 비율은 38%(2010년)에서 36%로 감소하는 등, 지난 2년간 베이비부머의 부부관계의 질은 약간 향상되었으며, 평균 25년 이상 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비율(47%)이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3분의 1 정도가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고 이혼을 고려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결혼에 대한 만족이 낮고 이혼 고려비율이 높았음

3)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미국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MMI)(연구책임자: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Dr. Sandra Timmermann MMI 소장), 한국갤럽이 수행, 2013년 5월 2일 발표

- 2년 전에 비해 베이비부머 중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음(2010년 31% → 2012년 17%). 그러나 18세 이상 성인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의 80%가 성인자녀와 동거하고 있고 이들 자녀의 평균연령은 20대 중반, 취업비율은 35%에 불과하며 거의 미혼상태이기에, 베이비부머 대부분이 동거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임. 여기에 비동거 손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 4명 중 1명이 양육에 참여하며, 일부는 정기적으로, 일주일 평균 43시간의 긴 시간을 손자녀 양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2년 사이 노부모세대가 생존해 있는 베이비부머의 비율은 감소하였지만(2010년 83% → 2012년 70%), 여전히 노부모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은 높은 것으로 조사됨. 2012년 베이비부머의 71%가 부모세대가 생존해 있는데, 이 중 10% 정도는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68%가 노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43%는 지난 2년간 노부모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에 비해 소득은 감소한 반면 베이비부머 가계의 자녀 관련 비용 지출과 보건의료비 지출은 크게 증가하였고(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출 27% 증가, 보건의료비 11% 증가), 대신 여가비 지출은 감소하였음(여가비 14% 감소).
- 베이비부머의 대다수가 재무 교육 경험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 지식도 부족함. 베이비부머 중 과거 재무 교육을 받는 경험이 있는 비율은 8%에 불과하여, 금융문해력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35% 정도에 그쳤음
- 지난 2년 사이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삶을 대비한 경제적 준비는 취약해졌음.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기업연금 가입율은 2년 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지만(국민연금 79%, (특수)직역연금 6%, 기업연금 15%), 개인이 조정 가능한 부분들은 예외없이 감소하였음. 개인연금은 44%에서 38%로 감소하였고, 보험은 82%에서 77%로, 예금 및 적금은 69%에서 64%로, 펀드는 13%에서 9%로 감소하였음. 특히 부동산의 경우 50%에서 24%로 절반이나 감소하였음.

- 베이비부머 중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를 모두 갖춘 비율이 14%에 불과하며, 은퇴 후 생활비 충당을 위한 저축 및 금융투자 역시 충분하거나 차질없이 준비하는 비율이 21%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미흡하거나 준비 계획 자체가 없는 실정임
- 취업경험이 있는 베이비부머 남성의 10%, 여성의 18%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가교일자리(bridge job)에 있으며, 더 이상 구직할 의사가 없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은퇴한 경우는 전체 베이비부머의 4%에 그쳤음
- 은퇴자들의 45%가 은퇴 후 삶이 이전만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 은퇴 후 삶이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음
- 베이비부머 3명 중 2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의 84%가 인터넷의 유용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49%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음
- 베이비부머의 61%가 운전을 하고 있으며, 운전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대부분은 건강이나 경제적 여력이 되는 한 고령이 되어서도 계속 운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
- 현재 베이비부머 3명 중 1 명꼴로 신체질환이 있음. 특히 두 가지 이상 복합질환이 있는 비율은 2010년 7%에서 2012년 10%로 증가하였음
- 높은 실업률, 대량 은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자영업자의 급증과 몰락 등 거시지표 상으로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모습 속에 투과된 지난 2년간 베이비부머의 삶이 그리 녹록치 않았음은 물론, 이들 삶의 변화의 방향성이 다소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절실함
- 이 보고서는 2년 사이에 많은 베이비부머가 건강증진 행동을 시작하거나, 가족관계가 좋아지는 등 삶의 많은 영역에서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미래 노년인구의 모습을 예측하고 사회 및 경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베이비부머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불평등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과 함께 마켓, 상품과 서비스, 제도 고안에 있어 베이비부머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차별화된 접근을 제안하고 있음
- 베이비부머의 만성질환 유병율이 1955~1959년생은 30.6%, 1960~1963년생 22.9%로 조사된 바 있음<sup>4)</sup>
-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 만성질환이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무배우자(31.7%)나 1인 가구(30.1%)가 더 높고 미취업자(36.3%)나 저소득계층에게서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취약계층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노인의료비 및 장기요양비의 증가요인은 만성질환의 이환정도, 중증화정도, 치료비용규모 등이 일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그러한 비용의 폭증을 사전적으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베이비 부머와 같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 요구되며, 장기요양 비용증가의 억제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베이비부머가 퇴직연령대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약 15만명씩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이행해가는 시점에서 이들 베이비부머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 위치하는데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4) 외,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